

인권도시 서울의 약속, 서울인권정책 제1차 기본계획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정정길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경과

서울시민권리선언 (1 1 . 1 0 . 1 9)

- 서울시 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 실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선언
- 전문 : 차별금지과 평등, 문화적 다양성 존중
- 10조 : 정보, 참여권, 표현의 자유, 도시서비스, 안전권, 이동권, 환경권, 일할 권리, 교육 문화 건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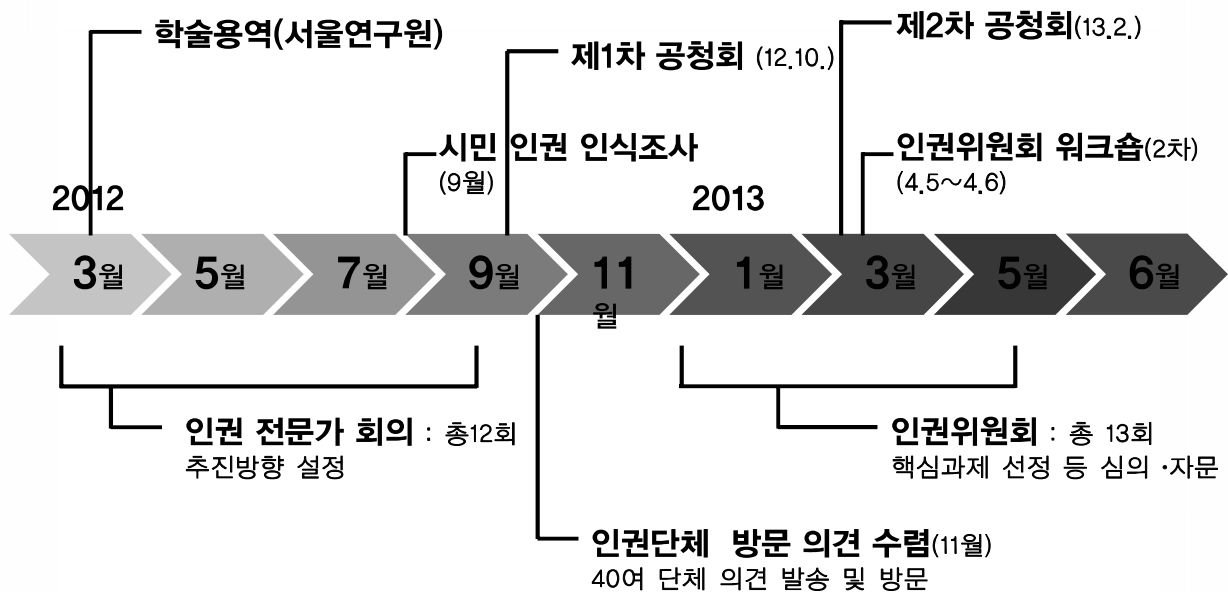
인권가치제도화

- 인권기본조례 제정 (12.9.28)
- 인권전담부서 신설(12.9.28)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12.11.27)
- 시민인권보호관 도입 (13.1.2)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근거 : 인권기본조례 제7조, 제8조
- 5개년 중기 계획(13년~17년)
- 정책과제, 추진목표, 실행계획, 소요재원
-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수립과정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역할

- 2012.11.27 구성 후, 총 13회 공식 회의 (워크숍 2회) 개최
- 과 정
 - ① 수립방향 및 체계 논의
 - ② 중점과제 논의 등 사업개발 및 보완
 - ③ 대표사업 선정 및 네이밍



- 위촉식(12.11.27), 임시회(12.11)
- 예비회의(1.2), 워크숍 (1.4)
- 사회적 약자 소회의(1.21)
- 임시회(1.24)



- 13년도 제1차 정기회(2.28)
- 이주민 분야 부서장 회의(3.6)
- 노동분야 부서장 회의(3.12)
- 장애인분야 부서장 회의(3.14)



- 인권위원회 임시회 개최(3.28)
 - 부서장 회의 등 의견수렴결과 검토
- 인권위원회 워크숍(4.5~4.6)
 - 13개 대표사업 선정 및 네이밍 논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성격

기본계획의 특징

- 전 시정에 최초로 인권관점을 도입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
- 과제별 목표, 예산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실행력 확보
-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중점 추진
-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타 기본계획과의 관계

- 인권관점 정책 방향 수립 : 장애인 탈시설정책으로 전환, 이주민 인권관점 정책추진, 인권고려계약제도 추진
- 기존사업을 인권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조화
- 기존의 문제있는 행정관행 개선 : 행정대집행시 강제퇴거개선
- 의미 있는 기존사업 확대 발전 : 저상버스(2018대→3685대),교통약자형 버스단말기 도입,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영등포→동자동, 홍릉동 등)

기본계획 체계

정책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정책목표

5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중점과제 25

• 장애인
•여성
•어르
•노년
•어린
•이주
•피해
민
자

•장벽없는 도시
•안전보장도시
•주거권보장도시
•인권기억도시

•인권행정 환경개선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문화조성

•인권행정
•인권제도

•시민참여
•인권도시
네트워크

추진과제 73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대표사업

I . 인권약자 인권증진

1. 탈시설 장애인 정책으로의 전환
2. 돌봄 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 확대
3. 취약 노동자 인권 실질적 증진
4. 고령화시대 적극 대응하는 어르신 인권 증진
5. 인권관점의 이주민 정책 추진
6. 인권피해자 등 치유 지원

탈시설 장애인 정책으로 전환

5년내 시설 장애인 20% 탈시설 프로그램 가동



보호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에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의 권리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규율, 통제 중심으로 인권 보장 한계
-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중심의 생활

세부 추진 계획

-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주거지원 확대
-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 개발
- 시설이용자 자립준비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제공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 확대



인권사각지대 에 있었던 돌봄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여건 개선

※ 돌봄노동자 : 노인요양서비스, 간병서비스, 아동방문보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후조리, 가사 서비스 종사자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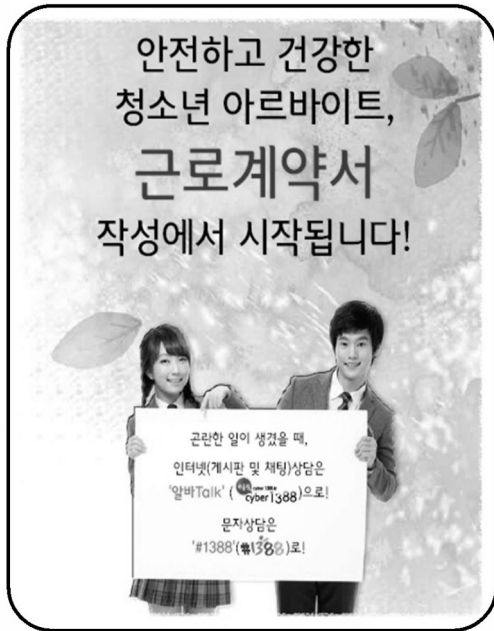
- 최저임금 수준 미달 등 열악한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공적 제도 적용 제외
- 팔, 허리통증, 우울증 등 각종 질병 보유

세부 추진 계획

-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 돌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 공모사업 통해 <가사노동자 건강 사업> 추진 등

취약 노동자 인권 실질적 증진

※ 취약노동자 : 조조미가입자,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 4대보험 미적용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가장 어려운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131만명
- 임금총액 정규직의 59%, 최저임금 미만계층 지속 증가
- 영세사업장 보험가입률 60~80%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발생

세부 추진 계획

-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노동기본계획 수립으로 노동인식 개선 등 정책 추진
- 청소년 근로보호 가이드라인 등 조치
-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15년까지 6,231명)

고령화 시대 적극 대응하는 어르신 인권 증진



고령화가 가속되어 어르신 인구 급증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
따라서 이를 적극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가속
- 서울인구의 10% 어르신('11년)
- 고학력, 전문직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
- 신 노년층 대상 복지시설, 정책 부족

세부 추진 계획

- 일자리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구 1센터 설립
- 문 화 : <어르신영화제> 등 문화콘텐츠 확대
- 건 강 : <어르신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재가간병 지원

인권관점의 이주민정책 추진



한 도시의 인권수준은 이주민인권과 비례,
그 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영역으로 적극 포함하여 인권증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거주자 4%가 이주민, 향후 증가 전망
-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참여 배제
- 가정, 사업장 내 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

세부 추진 계획

- 이주민의 목소리 반영하는 정책체계 추진
 - 이주민 인권전담 창구 신설 및 대표자회의 운영
- 이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
- 보건소 등 의료접근권 확대 추진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인권피해자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본격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후유증
 - 76.5% 외상후 스트레스, 24.4% 자살시도
- 후유증이 가족, 사회, 세대에 전달

세부 추진 계획

-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
- 집단 상담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추진
- 의료인 대상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자료 개발·보급
 - 정신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의료진 이해 증진

II.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1.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2.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증진
3. 시민의 평생학습권 신장
4.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조성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1.9% (41만 가구, 2010)
- 밀집거주로 주거 안정성 및 질 저하
- 공동부엌, 화장실 등 위생설비 개선 필요

세부 추진 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바우처 확대
- 쪽방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강제퇴거 개선
- 재개발 사업은 <사전협의체 구성>으로 사전 논의
- 행정대집행은 <인권 매뉴얼>을 제작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증진



장애인, 노인, 아동, 영유아 동승자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저상버스, 장애인 이용 곤란 상황 빈발
 - 기사와 소통 방법 부족 등
- 장애인콜택시 취약시간대 평균 대기시간 : 62분

세부 추진 계획

- 저상버스와 이용자간 의사소통 수단 확보
 - 탑승예약 앱 및 교통약자형 단말기 보급
- 취약시간대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 목표 : 62분→38분
- 지하철 「1역사 1동선」 추진
-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

시민 평생학습권 신장



사회변화, 기술발달로 더욱 중요해진 **평생학습**,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민의 권리 적극 신장**

현황 및 문제점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요구증가
 - 기대수명 증가 : 79.6세('10년)→81.5세('20년)
- 제2의 인생설계 등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 26.4%('08년) → 35.6%('12년)

세부 추진 계획

- 프로그램 및 접근방법 다양화
 - 평생학습포털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확대
 -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 확대
- 노동인권교육 및 시민인권아카데미 추진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조성



생활속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곳곳을 살아있는 **인권의 배움터**로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인권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 기념 필요
- 예) 남산 안기부터, 서대문 형무소 등
- 인권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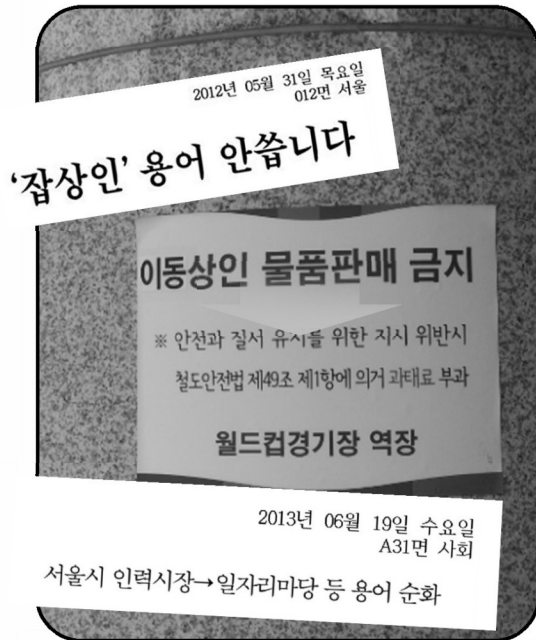
세부 추진 계획

- 인권기행 추진
- 남산 안기부터, 서대문 형무소 등 탐방코스 조성
- 시립 도서관에 인권자료실 설치
- 인권공공디자인 설치
(예 : 세계인권선언문 도로경계석 조각 등)

Ⅲ. 인권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각종 차별시정 적극 추진
2. 공무원 인권교육 전면 실시
3.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정착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차별시정 등 적극 추진



시민 삶과 밀접한 영역부터

인권 존중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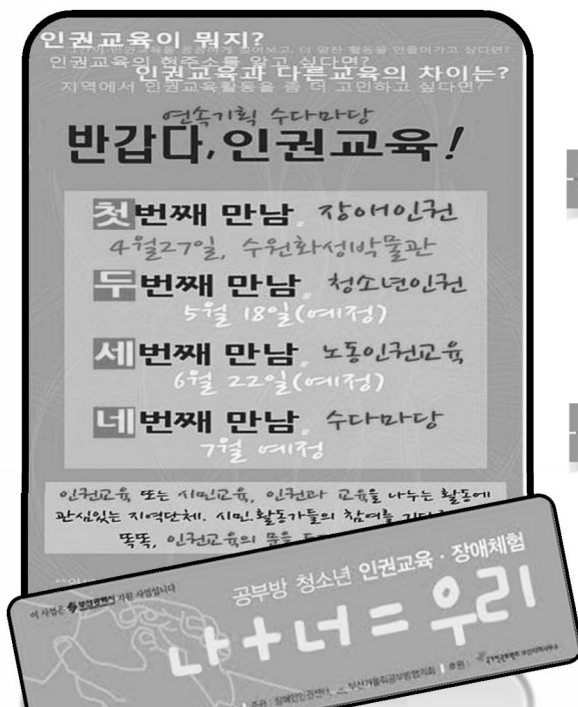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시민의 인권을 고려해야 할 현실적 사항 증가
- 예) 인권침해적 공공언어 사용, 행정대집행
- 계약 등 인권가치 적용이 필요한 행정영역 증가

세부 추진 계획

- 인권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행정 영역에 대한 인권매뉴얼화 추진
- 인권비하적 용어개선 및 순화용어 사용
-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영

공무원 인권교육 전면 실시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여,

인권도시 실현 원동력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인권교육 경험 전무
- 공무원 인권감수성 부족
- 예) 환경미화원 비인격적 처벌(모 구청 사례)

세부 추진 계획

- 연 4회 「인권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 사업소, 투자출연, 복지시설까지 인권교육 확대
- 인권관련 부서 ⇒ 체험식·토론식 교육 강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정착

2013년 01월 01일 화요일
022면 피플

시민인권보호관 3명 임명



박원순 서울시장
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청 6
층 집무실에서 시
민인권보호관으
로 채용된 이운상
·염규홍·노승현
씨 등 3명에게 인
사발령장을 수여했다.

지자체 최초로 운영되는 인권옴부즈퍼슨
활성화로 시민인권침해 적극 예방

현황 및 문제점

- 조사건수가 증가, 예산 및 현장조사 인력 부족
- 43건(1~3월) ⇒ 61건(4~6월)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

세부 추진 계획

- 업무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
- 전임계약직 전환 등 정원 확보 추진
- 시민참여배심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 방안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례8조)

- 2014 소요예산 편성 (9월중)
- 중기재정계획 반영
- 연도별 시행계획 인권위 보고

2

인권보고서 발간

- 2년 주기 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정책 추진 및 개선사
향

3

기본계획 추진사항 평가

- 5년 주기 기본계획 실행여부 평가
- 필요시 평가담당관 평가 의뢰
- 미흡사업 인권위 개선 권고 등

○ 서울이 그리는 인권도시 서울은...



감사합니다.